지정폐기물 업체 점검 손 놓은 영산강환경청

226곳 점검계획 세워놓고 실제 점검 22곳 그쳐…점검률 9.7%

7개 환경청 중 최저…불법 폐기 적발 어렵고 막대한 혈세 낭비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 광주와 전남지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한 현장 지도관리와 점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애초 계획했던 현장 점검 일정도 대부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폐기물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로, 법령에 따라 적정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1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청은 지난 2019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226곳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실제 점검은 22곳에서만 진행됐다. 점검률이 고작 9.7%에 불과하다보니 어떤 업체를 점검한 것인지, 왜 그 업체를 점검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만하다.

영산강청의 점검률은 환경부 산하 7개(한강·금강·낙동·대구·원주·전북) 환경청 중 가장 낮았다.

임 의원은 "금강청과 원주청의 경우 점검 계획보다 더 많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점검, 점검률이 106%를 기록한 반면 영산강청은 고작 10%도 못 미치는 점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구청 55.4%, 낙동강청 37.5%, 전북청 32.6%, 한강청 31.9% 등의 점검률과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7개 환경청의 평균 점검률(3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점검을 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8년에도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점검률이 46%에 머무는 등 환경부 산하 7개 환경청의 평균 점검률(46.7%)에 못 미쳤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점검 관련 부서 직원이 4명에 불과해 원활한 현장 지도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이 허가와 점검 등 지정폐기물 관련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해 점검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당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 피해 뿐 아니라 불법 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투입도 불가피하다.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사무처장은 "현장점검은 지정폐기물 발생, 운송,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활동"이라며 "낮은 점검률은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불신과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영산강청의 타지역 대비 낮은 점검률은 의지의 부족인지 지역청의 구조적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홍정운군 추모 촛불집회…재발 방지 촉구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18)군 사고와 관련, 홍군 친구들이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처벌의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홍군을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군의 친구들이 참석, 사고로 숨진 홍군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홍군과 친했던 친구 A군은 "몇달 전 함께 편의점을 갔는데 정운이가 개인요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면서 "같이 해보자고 한 정운이는 없지만 정운이를 대신해 반드시 그 꿈을 이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A군은 "여수에서도 11일째 정운이를 추모하는 지역민들이 모이고 있다"면서 "흐지부지 끝내지 않게 힘과 용기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홍군과 3년 동안 같은 반이던 김준혁군도 "정운이는 닮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깊고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는 착한 친구"였다며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하자고 했던 약속이 많은데…"라며 속상해했다.

다른 친구 이민주양은 "낯선 현장을 처음 마주하는 어린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현장실습장을 만들어달라"면서 "정운이같은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져달라"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16일 서울시청 광장앞에서 여수 실습생 故 홍정운군의 친구들과,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이 모여 홍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전국특성화고등노동조합 제공〉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다음 중 보이스피싱 문자는?

전남경찰청 국감에서 질의

진짜·가짜 구별하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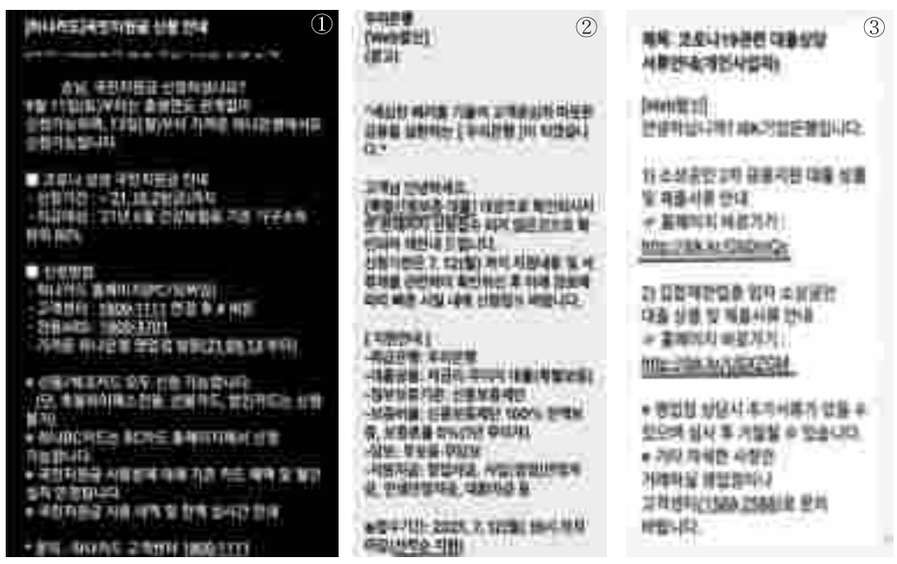
범죄 예방 적극적 대처 필요

"어떤 게 보이스피싱 문자일까요,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15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3개의 문자메시지를 대형 화면에 띄우며 물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3개 다"라고 했고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모르겠다는 게 답일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김 청장 답변을 기억해내며 재차 물었다. 앞서 서 의원이 노인들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대책에 대한 다른 의원 질의를 이어받아 "피해당하지 않는 요령이 뭐냐"고 묻자, 김 청장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어르신들께 요령을 자꾸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었다.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잘 교육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서 의원은 이어 "할아버지, 할머니만 속을것 같은가요?", "안낚일 재주가 없습니다,지금 안 속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첫 번째 문자(①)만 금융기관에서 보낸 진짜 메시지"라고 했다. 나머지는 다 (해당 메시지 내 문자를) 누르는 순간, 원격제어장치가 깔리게 된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서 의원은 다시 3개의 문자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코로나 백신 예약 문자, 행정안전부의 국민지원금 신청현황, 건강검진 진단결과 등이 적힌 문자였다. "3개 중 어떤 게 진짜 같은가요"라고 묻더니 "전부 다 사기 문자"라고 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인터넷주소가 다르고, 행안부는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안보낸다"고 했다. 서 의원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라며 "자꾸 교육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첨단으로 달리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들어 8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64명. 50대가 15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130명), 60대(73명) 등이었지만 20대(48명), 30대(42명) 피해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당한 피해금액도 149억으로 전년도(66억)에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서 의원은 "현재 휴대전화 제조 단계부터 원격제어장치 설치를 막아달라고 경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역 특성상 중장년층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방지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험 살인 설계' 동창들 추가 살인 공모 드러나

공범과 혼인신고한 여성과 짜고 보험금 노리고 동료 살해 기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2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고교 동창생들〈광주일보 10월 12일 6면〉의 추가 살인 공모 계획이 드러났다.

화순경찰은 17일 20대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보험설계사 A(20)씨 등 3명과 공모, 또 다른 20대 남성 살해 계획을 세운 혐의(살인예비)로 B(여·20)씨를 구속했다.

B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남성 C씨를 지난 5월 A씨 등 일당 3명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함께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C씨를 살해,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C씨와 등산을 가는 것처럼 속이고 산으로 유인, 절벽에서 밀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여성을 꾀어 사귀는 척 환심을 산 뒤 살해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과 보험사기를 벌이던 공범 동료까지 살해, 보험금 수령 계획을 세웠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C씨는 A씨와 B씨 등 공범들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

경찰은 C씨가 다른 공범들과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 때문에 자신의 살해 계획을 접하고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인 A씨가 가입시킨 보험자 명단을 확보, 여죄를 추궁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사정보 유출·사건 청탁 등 검찰, 전·현직 경찰 수사 확대

검찰의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사건 청탁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겉으로만 피의사실공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청탁, 알선하는 등 경찰 수사의 이중 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후배인 B 경위의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직 경찰로 근무하다 오락실 사건에 연루,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당시,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B 경위는 수사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사건 수임 청탁과 관련해 B 경위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 사무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또 전남경찰청 C 경위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C 경위도 B 경위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휴대전화로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학연 등으로 얽힌 전·현직 경찰로 확대되면서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2586	1	목포시 평화로20번길11, 501동 1층 105호 [상동,우미파크빌] 84.9723㎡	아파트	154,000,000 154,000,000	
2021타경2647	1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63-7, 204동 4층 408호 [현대삼호2차아파트] 59.75㎡	아파트	50,000,000 50,000,000	
2021타경2906	1	목포시 둥근성로54번길11, 12동 5층 3호 [산정동,삼학아파트] 15평5홉2작	아파트	39,000,000 39,000,000	
2021타경2975	1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50, 16층 101동1603호 [골든스위트] 59.88㎡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2021타경51656	1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160, 104동 6층 604호 [금호타운] 59.92㎡	아파트	60,000,000 6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51731	1	목포시 산정동 1039-167 118㎡[공유자최미영1/6지분전부]	대	8,901,59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목포시 원호길5번길 1 단층 43.97㎡ 단층광 3.97㎡ 제시외 처마 등 41.95㎡[공유자최미영1/6지분전부]	단독주택	8,901,59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702	1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603-1 432㎡	대	20,334,000	일괄매각.현황'나대지'상태
		동소 603-3 11㎡[물건번호1:마을주민들이농기계임시보관장소이용중인것으로파악]	대	20,334,000	
2021타경2708	1	영암군 영암읍 엮리 407-4 1979㎡	답	328,514,000 328,514,000	현황'묵답'상태
2021타경52000	1	무안군 몽탄면 귀학리 341 575㎡[주위로대나무등무성하게자라있어출입곤란하여분묘소재여부확인못함]	전	6,325,000 6,32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
2021타경52192	1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산125 1557㎡[포털위성도계측상약18,000㎡로공부상면적과상당한차이있으므로측량등통해면적확인요]	임야	18,684,000 18,684,000	
[기타]					
2021타경1743	1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513-38 3726㎡ 제시외 창고 등 369.2㎡	공장용지	710,501,200 710,501,200	일괄매각.기계기구목록및제시외건물포함.기계기구기호1-1]일부기계내부에부착되어있거나공장내부에산재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489-12 단층 573㎡ 제시외 냉동장비 1식	창고시설		
		동소 2동호 단층 315.6㎡ 제시외 무 세척라인 1식[물건번호1:기계기구기호1-2],1-4]~1-7]수량기계기구목록상수량과상이[감정평가서참조],기계기구기호3]소재불명.기계기구는상당기간가동치않고방치한상태,정전등으로인해정상가동유무확인불가.별지기계기구목록외공장내부소재하는소유자미상기계기구및이동가능한컨테이너2동매각제외]	창고시설		
2021타경51588	1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38 142㎡[현황도로및도로법면]	답	7,312,000 7,312,000	일괄매각.현재'금정~유치간지방도확포장공사'에편입되어도로확포장공사중
		동소 127 575㎡[현황도로및도로법면]	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11. 1.(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11. 8.(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